

# 尹 “진상규명이 우선”… 사그라드는 이상민·윤희근 경질설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대통령실, 사고수습 우선 처리 입장  
국민의힘, 야당 요구 국정조사 반대  
민주·정의당, 장관·청장 경질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이번 참사에 대한 주무부처 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질 여부가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참사 이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경찰이 개입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도적 보완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1일 경찰이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정부 책임론’으로 분위기가 반전됐고, 재난관리 주무부처 장관인 이 장관과 윤 청장이 경질되는 것이 아니냐고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가에도 기간인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서울시청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하면서 4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이 장관과 동행하며 희생자들의 명복과 유가족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윤 대통령이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의 비공개회의에서 한 발언을 놓고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 후 경질 등 문책성 인사 방향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비공개회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국민에게 가감 없이 회의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비공개회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 장관과 윤 청장이 경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위기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경찰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다. 저는 시스템이 안 되고,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윤 청장을 향해 “4시간 동안 점유통행 공간을 넓혀줘야 하는 긴박한 상황 조치가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우리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책임을 갖고 규명을 해달라”며 “경찰 청장님께서도 보고체계를 중첩화시키는 것을 좀 시스템화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윤 청장의 책임을 물어 경질을 염두하고 있다면 이같은 지시는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참사 초기만 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문책성 인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됐으나, 대통령실은 사고수습과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국민의힘

은 용산경찰서장에게 1차 책임이 있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현안질의를 언급하며 “국민 65%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데 이 장관은 대통령만 믿고 버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56명이 희생되고 197명이 다쳤지만, 윤석열 정부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국무총리 경질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정의당 대표도 “윤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는 집중 질타를 하면서도 정작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이 두둔하고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며 “참사의 모든 책임을 경찰로 몰고 끝내겠다는 일종의 꼬리자르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與 “정쟁 일삼아” vs 野 “정치적 책임지라”

국회 운영위 국감서 여야 책임 공방  
국민의힘, 문진석 문자 공개하며 비판  
민주당, 관련 부처 수장 사퇴 요구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국감사가 열린 8일,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을 두고 여야의 논쟁이 뜨거워 가는데 국민의힘은 야당이 책임 추궁을 빌미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부재로 대규모인 명피해를 낳은 정치적 책임을 지라며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경찰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겨냥한 만큼 관계자들의 입에 시선이 쏠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언론에 의해 포착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받은 문자를 거론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문자 내용을 회의장 내 화면에 띄우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태원 참사 전체 희생자 명단과 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에서 공개하고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으로서, 희생자의 유가족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라며 “행안위, 예결위에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외치고 있다. 저는 묻고 싶다. 국회는,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 156명의 ‘희생자’, ‘참사’란 용어를 쓰면서 (참사) 다음날부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국정조사 등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

명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김 실장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대통령실 참모가 사의를 밝힌 적 있느냐”라고 묻자 김 실장은 “없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께 김 실장이 문책성 인사를 건의한 적이 있느냐”라고 재차 질문하자 김 실장은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천 의원이 참사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고 다그치자 “저희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대한민국 정부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다. 수사 결과를 보고 있다”면서 “사람을 바꿔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냐. 인사청문회를 하면 두 달이 흘러가서 행정 공백이 생긴다”고 해명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대형 참사 후 국무총리나 주무부처 장관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재신임을 약속했느냐”라고 물었으나 김 실장은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회 정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윤종진 국가보훈처 차장. /뉴시스

## 與, 민생 예산 증액 목표… 시한 통과 관심

더불어민주당 총돌 불가피

국민의힘이 ‘민생, 약자, 미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법정 시한(12월 2일) 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캘러윈 이태원 참사 책임론 공방부터 현 정부 국정과제 예산 삭감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면서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예산을 감축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부담 완화 ▲4대 민생침해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 사기)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미래 세대 지원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관련 예산안은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밝힌 예산안 증액안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민

생’ 관련 부문이다. 연말정산에 앞서 당은 ‘장바구니 소득공제’로 가구당 1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 여기에는 총 7667억원이 투입된다.

고금리 시대에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4억→9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늘리는데 2342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한계 소상공인 약 3만명에 30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의 1~2%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데 1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 안정(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589억원 증액)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119억원 증액) ▲2층 전기버스 확충(101억원 증액) 등에도 예산안을 증액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민생·안전 관련 예산안을 5조원 이상 증액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尹 대통령, 한남동 관저 입주 마무리

집무실까지 5분 안팎 소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8일 한남동 관저 입주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전날 저녁부터 서초동 사저가 아닌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9시 11분경 관

저에서 첫 출근길에 올랐으며 비공개 외부일정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서울 모처로 이동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까지 10분여가 걸렸다면, 한남동 관저에서 집무실까지는 5분 안팎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통통제 등 경호로 인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존 서초동 사저는 매각하지 않고 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기존 외교부 장관 관공을 새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7월 중순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경호·보안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면서 입주 시기가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입주 시기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